



---

## 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정책질의서 답변 결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정당별 입장

---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2020년 4월 6일 •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이 메 일 | [equalact2017@gmail.com](mailto:equalact2017@gmail.com)
- 홈페이지 | <https://equalityact.kr/>
-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6-201-50761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및 사회구성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각 정당의 의지와  
차별과 혐오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정책질의서를 발송한 27개 정당 중 17개 정당이 무응답이었으며,  
답변을 보내온 10개 정당의 입장을 공개합니다.

정책질의서 답변 기간 : 2020년 3월 23일(월)~31일(화)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질의서

### ▣ 발송정당 | 총 27개 정당

가자코리아, 가자!평화인권당, 가자환경당, 국가부패척결당, 국가혁명배당금당,  
국민새정당, 국민의당, 국제녹색당, 기독교자유당,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대한민국당,  
더불어민주당, 미래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민생당, 민중당, 새누리당, 자유통일당,  
정의당, 한국경제당, 한국복지당, 한민족사명당, 한반도미래연합, 흥익당

- 3월5일을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등록이 된 곳 중 이메일 주소가 확인된 곳

#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

Q.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언어, 인종, 피부색, 국적,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상황,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출신학교, 경제적 상황, 병력 또는 건강상태, 유전형질,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고용형태'의 차별사유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귀 정당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 1. 무응답 정당 (총 17개 정당)

가자코리아, 가자!평화인권당, 국가부패척결당, 국가혁명배당금당, 국민새정당, 국민의당, 국제녹색당, 기독교자유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민생당, 새누리당, 자유통일당, 한국경제당, 한국복지당, 한민족사명당, 한반도미래연합

## 2. 제정에 동의한 정당 (총 8개 정당)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대한민국당, 미래당, 민중당, 정의당

## 3. 제정에 **반대**한 정당 (총 1개 정당)

홍익당

## 4. 제정에 대한 기타의견 (총 1개 정당)

더불어민주당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음. 어떠한 차별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침해,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정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선행되어야 함.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각 정당별 입장

번호	응답 (27)	무응답 (17)	제정 동의 (8)	제정 반대 (1)	기타의견 (1)
1	가자코리아	가자코리아			
2	가자!평화인권당	가자!평화인권당			
3	가자환경당		가자환경당		
4	국가부패척결당	국가부패척결당			
5	국가혁명배당금당	국가혁명배당금당			
6	국민새정당	국민새정당			
7	국민의당	국민의당			
8	국제녹색당	국제녹색당			
9	기독교자유당	기독교자유당			
10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		
11	노동당		노동당		
12	녹색당		녹색당		
13	대한민국당		대한민국당		
14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15	미래당		미래당		
16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17	미래한국당	미래한국당			
18	민생당	민생당			
19	민중당		민중당		
20	새누리당				
21	자유통일당				
22	정의당		정의당		
23	한국경제당	한국경제당			
24	한국복지당	한국복지당			
25	한민족사명당	한민족사명당			
26	한반도미래연합	한반도미래연합			
27	홍익당			홍익당	

## 2. 차별 및 혐오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

Q. '한국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를 해소하기 위한 귀 정당의 정책 대안은 무엇입니까?

### ▣ 답변 정당 | 총 10개 정당

- 가자환경당

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 존엄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가자환경당은 아래와 같은 정책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 1) 공공녹지공간에 대한 용이한 접근성 강화, 도보로 접근 가능한 영역에서 공원 및 녹지 확보,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분포에 따른 맞춤형 공공녹지공간의 확보
- 2) 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가사노동의 존중 및 가치부여, 전 생애에 걸친 평등한 성역할학습을 위한 시민교육 확대
- 3) 여성의 사회참여 및 공평한 기회보장, 여성고용자 중 관리자비중 확대, 여성의 정치적인 역량지표 강화
- 4) 심리적, 존재론적, 정서적 차별도 차별이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차별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인권문제입니다.  
가자환경당은 차별금지법제정에 찬성합니다.

- 기본소득당

-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

- 완전고용을 전제로 설계된 전통적 가족제도에 기반한 복지시스템을 넘어, 개별적 소득보장을 통해 다양한 가족 구성 방식, 삶의 방식 보장

- ‘성평등임금법’제정 및 ‘성평등임금위원회’ 구성으로 당해 성별임금격차 해소 최저선 구축
- 노동법 개정
  - 채용 과정 뿐 아니라 직장생활 전반에서 결혼 여부를 묻는 것을 금지
  - 성별과 상관없이 양육자 모두에게 육아휴직 의무화
- 공기업 및 공공기관 경영 평가 체계에 성평등 항목 의무화
- 다양한 가족구성의 권리 보장
- 응급 의료 상황 등에서 가족 이외에도 지정1인 법정 대리인 지정
- 의무교육 과정에 페미니즘 교육 포함
-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 ● 노동당

노동당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언어, 인종, 피부색, 국적,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상황,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출신학교, 경제적 상황, 병력 또는 건강상태, 유전형질,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고용형태’의 차별사유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21대 총선의 핵심정책으로 채택했습니다.

## ● 녹색당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는 미루어서는 안 될 필수이자 기초적 방안입니다.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에서 성별 표시를 삭제하고, 성별정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법제화해야 합니다. 성소수자 군인을 범죄화하는 균형법 92조의 6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HIV 감염인을 낙인찍고 차별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9조와 25조의2를 개정해야 합니다.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해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하고, 동성결혼 법제화 등 혼인평등을 이루어 가족 형태, 커플 형태 등에 따른 차별을 해소해야 합니다.

평등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 관습은 결코 개선되지 않습니다. 초중고 전 과정에 성평등·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실효성 있는 과정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교원들 또한 이러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평가받아야 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차별과 혐오는 또 다른 폭력으로 우리사회 없어야 할 악습이라고 봄. 사회 전반의 구조적 성평등을 이루지 않고서는 미시적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성희롱 금지와 피해 구제 절차를 구체화한 성차별·성희롱금지 권리구제관한 법률 제정을 중점추진 법안과 21대 총선 공약에 포함하여 적극 추진 중이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발의 취지를 살리는 개정안 추진, 성폭력 예방 교육의 강화, 여성 대표성 제고,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을 통해 구조적 변화를 추동 해 나가야 함.

● 대한민국당

대한민국당은 사람중심의 정책과 인간중심의 철학으로 사람위에 사람없고 사람밑에 사람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당력을 집중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우선 정책화 하겠습니다.

1. 2013년 2월 12일 의안번호 3693으로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안의 철학을 존중하겠습니다.
2. 대한민국당은 인권존중을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세계인권위원회 활동인사를 정책고문으로 모심
3. 대한민국당은 차별금지법안이 미통과된 원인을 심층분석하여 전문가의 대안으로 상생할 정책 구안
4. 대한민국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간담회 토론회 및 쟁점토론회를 개최하여 최대공약수를 도출
5. 대한민국당은 사랑과 평화의 철학을 구현할 목적의 정당으로 생명사랑의 가치를 최우선 할것임

● 미래당

○ 혐오방지기본법

- 문제의식 : 대한민국 사회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헤이트 스피치가 만연해지고 있다.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더 나아가 폭력사태까지 번질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다. 일본 같은 경우 규제법은 있으나 처벌사항이 없는 규제사항이며 독일 같은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최근 반이슬람 반이민 정서가 커져 극우세력에 의한 강력범죄가 커지는 등 혐오로 인해 파생되는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 방향 : 심각해지는 혐오표현에 처벌이 필요한 시기이나 처벌만 한다고 해서 가능한 부분이 아니다. 처벌과 예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통해 단계적 접근을 시행한다.
- 방법 (간략한 정책내용):
  - ① 혐오방지기본법을 통해 혐오표현 개념 정의
  - ② 정의된 혐오표현을 공공장소 또는 sns에서 할 시 처벌조치
  - ③ sns 공간 또는 인터넷 공간상에서 관리자가 혐오표현에 대한 제재가 없을 경우 해당 기관 처벌조치
  - ④ 혐오방지위원회를 설립하여 중앙정부차원 예방교육 설립 방안 강구
  - ⑤ 기본법 재정으로 지자체 차원에서도 행동방안 강구

● 민중당

- 민중당은“차이가 차별이 아닌 다양함으로 존중받고, 개인의 정체성, 성별, 종교, 인종 등을 이유로 낙인찍히거나 폭력을 당하지 않는 세상”을 지향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함.
- 차별금지법은 혐오표현을 처벌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규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이 개인의 경험을 차별로 해석하고 이에 저항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 더불어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통해 가족구성권 보장, 「군형법」 제92조 6항의 폐지 등 차별과 혐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고민하고 실천해나갈 것임.



● 정의당

가장 기본이 되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함께 1번 항목에서 답한 혐오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의 제도화를 공약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HIV감염인 건강 등 인권보호를 위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후천성면역결핍예방 및 감염인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하여 감염인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성별 변경 성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절차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이번 제21대 총선 공약으로 포함시켰습니다.

● 홍익당

지금 한국 사회가 냉기가 어마어마해지고 있습니다. 냉기로 가득 차는 증상들인 소통이 안 되고 서로가 공감을 못 하게 되고 마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감을 못 하게 되면 소통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면 혐오감만 극대화 됩니다. 내가 좋을 일도 없고, 남 잘되는 것도 배 아프고, 그것을 공감해주기도 싫기 때문에 혐오를 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주장만 하니깐 이 사회가 시끄러운 것입니다. '내가 안 된 건 다 저 사람 탓이야.' '잘되는 애들, 재들 때문에 내가 망하고 있어.' 하고 혐오감만 있지,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어떤 정치색을 가졌 건, 어떤 사상을 가졌던 양심이 먼저입니다.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자"는 양심에 위배하고 찝찝한데,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편이 문제를 일으켜 양심에 찝찝한데 지금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다툼에서 밀릴까 봐 억지 주장을 하며 서로를 혐오하는 것이 현재의 문제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수록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고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홍익당은 진보-보수, 남성-여성, 노인-청년 등 사회의 각 계층이 양심 안에서 하나되도록 하자는 것이 당의 핵심적인 정치철학입니다.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혐오하는 것이 아닌 양심의 원칙인 몰입, 사랑, 정의, 예절, 성실, 지혜 안에서 서로 열린 대화로 가장 합리적이고 균형이 잡힌 대안으로 합심하여 문제를 풀어가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의 경영방침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이해관계자 모여 치열하게 논의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명확한 답을 내는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열린 소통과 현장의 의견을 듣는 아래의 노력을 해보려 합니다.

또한, 항산(恒産,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양심을 유지할 수 없다는 맹자의 말처럼 국민이 삶의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주거, 교육, 기본소득 정책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1) 국민과 소통하며 집단지성으로 문제를 함께 풀겠습니다.

- 국민에게 주기적으로 국가의 주요 현안과 과제를 브리핑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온라인 및 전국 곳곳에 국민 여론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함께 과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의 각종 회의자료, 정보 등은 안보에 문제가 없는 한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이 정확히 알도록 하겠습니다.

(2)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 피상적이고 근시안적인 선심성 정책보다는, 근본원인을 해결하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 탁상공론식 정책 수립을 지양하고, 현장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자명한 정책만 시행하겠습니다.
- 문제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정책의 경우, 국민에게 상세히 알려 함께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경과를 보고하겠습니다.

(3)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결혼율, 출산율 저하,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겠습니다!

- 신혼부부, 저소득 가구, 장애인 등에게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을 확대 제공해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드리겠습니다.
- 대학생·청년을 위한 공공 기숙사 확대로 저렴하고 품질 좋은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 자녀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국공립 24시간 어린이집, 유치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출산 후 보육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며, 자연스럽게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겠습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에 양심계발교육을 도입하여 훌륭한 인격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향상하고 양심계발 교육전문가로 육성하여 국가의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핵심역할이라는 자부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 (5) 인간으로서 존엄과 품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소득'을 현실적 여건이 허락 하는 선에서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예산사용을 최대한 절약하여, 마련된 자원 범위 내에서 기본소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사회에 실질적 가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익활동 참여로 일정한 소득을 누구나 얻을 수 있도록 확대해 가겠습니다.
- (6) 민주시민 양성을 기치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 양심계발 교육을 중심으로 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인품과 재능을 계발하도록 돕겠습니다.
  - 객관적 역량측정과 절대평가에 기반을 둔 수준별 학습프로그램을 통해, 학원의 도움 없이 개인의 학업성취도를 최대한 높이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7) 학벌보다 역량을 중시하는 사회문화를 구축할 것이며, 자신의 인품과 재능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평생교육 기관을 확대하겠습니다!
- 학벌에 상관없이 객관적 역량측정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추면 해당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 인품과 재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다양한 직업과 배움의 보람을 전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평생교육 기관을 확대하겠습니다.

### 3. 선거 시기 혐오예방을 위한 정당 방침.

Q. 선거 시기 혐오예방을 위한 귀 정당의 방침은 무엇입니까?

▣ 답변 정당 | 총 10개 정당

● 가자환경당

21대 총선 공론의 장을 민주주의 가치를 실천하며 존중과 포용사회로서의 통합을 위해 가자환경당은 아래와 같은 방침을 실시합니다.

- 1) 21대 총선 장애용어 바르게 사용하기
- 2) 21대 총선 혐오표현 하지 않기

● 기본소득당

- 정책 설계에 우선하여 다양한 관점의 정책영향평가를 바탕으로 모든 정책 설계 시 차별적인 요소나, 정책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기본소득당의 정책을 설계합니다.
- 모든 국민에게 조건없는 기본소득 도입과 더불어 5대 공공·사회서비스 무상 및 확대정책을 주요 핵심정책으로 선정하여, 2020년 총선을 연령이나 성별, 가족 구성의 여부, 자산 심사나 노동 여부의 심사 등 개인을 심사하는 선별적 복지제도를 넘어, 개인의 삶이 오롯이 보장되는 사회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노동당

- 노동당은 공식모임 시작 전에 ‘어떠한 편견과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상호 존중하는 사회를 우리당에서부터 실현하고 일상 생활에서부터 실천하기 위해’ 평등한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약속을 함께 낭독하며 시작합니다.
- 노동당은 모든 당직·공직 출마자들이 성평등 교육·장애인 평등교육을 이수해야만 출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 녹색당

녹색당은 공직후보자 선출 시 여성과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후보의 절반 이상으로 구성하고 성별이분법에 갇히지 않는 다양한 성별의 후보자들이 녹색당의 대표로 출마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당에서 공직후보로 출마하려면, 성평등·인권 등에 관한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녹색당은 ‘성평등한 선거운동 가이드’를 2012년부터 제작하여 배포·활용하고 있습니다. 선분에 참여하는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청소년, 청년 당원들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선거의 중요한 원칙으로 합니다. 선거운동 중 혹시라도 후보나 운동원이 ‘길거리 괴롭힘’ 등을 당할 경우에 어떻게 함께 대처하고 방어해야 할지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성소수자, 여성, 청년 후보들이 선거마다 꾸준히 출마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과 타정당, 유권자들에 의해 차별과 혐오, 비하, 편견 등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녹색당은 이런 배타적 선거문화, 이성애남성 중심적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더불어민주당

폭력과 협박, 증오범죄와 혐오주의는 우리 사회에서 지양되어야 할 범죄행위이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문제임.

불평등, 성차별적 사회 구조속에서 변질 된 현상은 없어져야 할 폭력이며, 선거 시기를 맞아 총선 성평등 캠프를 위한 우리의 약속을 담은 포스터와 관련 지침, 성평등 문화 조성 리플렛을 제작하여 각 캠프에 배포하고 있음.

성별, 인종, 연령, 학력, 장애 등에 관계없이 평등한 관계와 차별적 언행,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조치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음.

● 대한민국당

대한민국당은 선거시기를 맞이하여 혐오발언 및 혐오 문구 등의 표현을 방지하기 위한 당내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당내 윤리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1. 후보자 대상 인성교육과 캠프종사원에 대한 종합적 교육을 통한 인권에 대한 마인드를 공유함
2. 토론회나 방송 토론에 참가하는 연사의 원고를 인권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하여 시행함
3. 선거 공보물이나 현수막에 표현하는 문구도 당내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시하고 배포할 것임
4. 대한민국당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수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할것임
5. 대한민국당은 당내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차별금지에 우선적 정책화 할것임

● 미래당

차별과 혐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후보자 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민중당

지난 해 12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각 정당에 보낸 결정문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행해지는 정치인의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1월 8일 민중당 당원과 총선 후보자들이 함께 '차별과 혐오가 없는 21대 총선' 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보장의 궁극적 목적인 '인간의 존엄' 자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일 수 없습니다.

혐오표현은 공론장을 왜곡해 상호 존중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나아가 차별과 불평등을 공고화하며, 낙인과 배제가 구조화된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혐오표현은 용납될 수 없으며,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치권의 혐오표현은 철저히 규제되어야 합니다.

민중당을 대표해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고정관념에 기댄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으며, 선거 시기 혐오표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정의당

제21대 총선공약으로 “혐오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의 제도화”를 제시하였습니다. 특정 집단, 성별 등에 대한 혐오, 왜곡 표현 및 조장행위에 대한 대중매체와 광고의 자율규제 강화 및 벌금제 도입 검토, 혐오에 근거하여 신체상의 상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포함한 (가칭) 「혐오범죄 금지·예방·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공약을 방침으로 혐오 발언이나 행위 없는 선거운동을 할 것이며, 혐오 발언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묵인하거나 방조하지 않겠습니다.

● 홍익당

저희는 건전한 비판과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식의 막무가내식 비난은 큰 문제를 야기 한다고 봅니다. 저희 당은 양심에 기반하여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의 제안과 건전한 비판에 집중할 것이며, 타인에 대한 비방, 비난 등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저희 당은 이데올로기에 빠져 진보-보수, 남성우월주의-페미니즘 등의 분열을 조장하기 보다는 양심에 입각하여 가장 합당한 방향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